

IIRI Online Series

푸틴의 세계관과 유라시아 전략

이 상 준

국민대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2022. 4. 5

푸틴의 세계관과 유라시아 전략



이 상 준 | 국민대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푸틴의 세계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소위 ‘특별군사작전’ 1단계 주요 목표를 완수하고, 돈바스 지역의 주요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국제사회는 러시아군이 보여준 성과가 크지 않으며, 재래식 전력으로는 현재 전황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파시즘을 물리친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까지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러시아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푸틴이 점점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핵무기를 포함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국제사회는 푸틴(Vladimir Putin)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지금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전망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이 전쟁과 전쟁 이후 국제질서의 향방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 현대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푸틴의 행적은 늘 관

심이였다. 푸틴을 철권 통치자, 스트롱맨(strong man)으로 묘사했던 언론들은 전쟁이 시작되면서 ‘건강 이상설’ 등을 제기하면서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푸틴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6년 출간된 스티븐 리 마이어스(Steven Lee Myers) 전 뉴욕타임즈 기자의 「뉴 차르(The New Tsar: The Rise and Reign of Vladimir Putin)」는 러시아 최고의 권력자 푸틴 대통령이 점차 과거 차르와 같은 절대 권력자가 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마이어스 기자는 푸틴 대통령이 소련의 통치 스타일을 가미하면서 새로운 차르가 되어간다고 묘사하고 있다. 2013년 출간된 피오나 힐(Fiona Hill)과 클리포드 개디(Clifford G. Gaddy)의 「미스터 푸틴(Mr. Putin)」은 푸틴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러시아 국익과 푸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면 갖은 행동을 다하는 크렘린 요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KGB 출신으로서 푸틴은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하며, 필요하면 가짜 정보와 뉴스를 생산하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KGB에서 익힌 기술에 더해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들로부터 취득한 마케팅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력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푸틴의 자서전이나 평전 등을 보면 푸틴은 질서, 권위,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보존해 온 역사와 전통이 상실되면 가족과 사회가 해체될 것이라 믿으며 법질서, 규범, 규칙, 관행, 관습에 도전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유도는 규칙과 규범, 예식을 가진 스포츠였고, 대학시절 전공은 법학이었기에 푸틴은 법, 규율,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 이후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였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당시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실제로는 ‘법의 독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수직적 권력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푸틴은 강한 국가만이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변화도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정당정치와 입법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는 협상과 타협을 싫어하고, 의회의 정당세력은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실제 그의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하원은 점차 대통령의 통치 도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푸틴은 KGB 요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기에 정보수집과 기획 및 전략적 사고에 능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타협과 협상을 통한 정치보다는 입법·행정·사법·언론 등 정치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 푸틴은 정부가 선거 과정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벗어나 철저히 통제되고 기획된 선거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선거를 관리하면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

푸틴을 비롯한 실로비키들(KGB와 군부, 검찰, 내무부(MVD) 등 안보 및 권력기관 출신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통칭)은 애국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주의자(statist)로서, 시장경제 개혁으로 혼란을 빠졌던 1990년대를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혼란했던 17세기 동란의 시대(Смутное время 스무트노예 브레미야)와 견주면서 이러한 혼란을 막는데 국가 권력이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신봉한다. 푸틴은 외교무대에서도 상황에 따라 상대를 잘 배려하기도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지각하는 외교적 결례를 자주 범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예이다.

이렇듯 국가지도자로서 푸틴 대통령이 보여준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종합한다면, 푸틴은 전통 가치를 수호하면서 혼란과 서구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 국익, 영토보전, 주권을 지키는 수호자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푸틴은 러시아의 역사에 있어 유연하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애국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지도자로 남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야망을 완성하기 위해 유라시아 전략은 가장 중요한 출발선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은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과 ‘신(新)푸틴 독트린’을 지속·견지해가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글로벌 전략적 균형자로서 역할을 제고하고 공세적인 군사외교를 포괄적으로 전개하는 시작점이 된다. 특히 러시아는 유라시아 공간에서의 위상 제고를 통해 새 질서 구축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고자 한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대다수 유라시아 국가들은 정책적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소련을 통해 근대화를 경험하였으며, 전통적인 인식체계와 결합하여 권위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시장의 논리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국가 주도의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방세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로 연대하면 할수록 이들 국가와 서구는 단기간에 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이러한 틈새는 과거 소련이 지배하였던 공간을 넘어 자국의 지정학·지경학적 지평을 다시 확대하고자 하는 푸틴의 러시아 전략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유라시아 국가들도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활용하여 자국의 이해를 달성하고 대외정책을 전개할 뿐 아니라 러시아 이외 다른 세력의 이해관계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다른 세력 간 경합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련의 유산으로 형성된 제도적 유사성과 모스크바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 구조로 인해 아직은 러시아가 다소 유리한 전략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유리한 국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확대 유라시아 동반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 간 정치경제 시스템의 차이가 커서 유효한 역내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다만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묶을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에 미국과 EU의 진출을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중국의 일대일로구상도 견제할 수 있어 덕분에 러시아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에서 자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가치관 충돌로 생겨난 지정학적 단층지대로서 유라시아는 러시아가 나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이 되며, G2가 아닌 러시아가 원하는 다극체제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근외(near abroad)지역 국가들은 러시아가 유라시아 전략을 위해 가장 안정되어야 할 공간이다. 2000년대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공화국에서 일련의 민주화 혁명이 발생하였는데, 러시아는 이러한 현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러시아의 근외지역에서는 사회 불안 등으로 정권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러한 일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 선거 규탄 시위로 권좌에서 쫓겨날 위기의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정권을 지지하고 벨라루스와 국가연합 로드맵을 마련한 것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

로 2022년 1월 시위가 발생하여 혼란에 빠진 카자흐스탄에 2,500명의 공수부대를 파견하여 소요사태를 진압한 것도 러시아의 국가안보 전략에 따른 행동인 것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쿠데타를 포함해 러시아의 이해를 위협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권 탄생을 강하게 견제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정권이 존재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국가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러시아의 개입은 역사성, 디아스포라, 그리고 파시즘 척결 등 다양한 명분을 얻는 노력과 병행되어 진행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카자흐스탄 시위 진압 등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 미국과 중국만 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역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외균형을 표방하였지만, 친중 성향의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완전히 축출한 카자흐스탄 시위 진압은 유라시아 국가에서 러시아의 뜻을 거역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었다. 푸틴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카자흐스탄을 수호했다. 내부의 색깔 혁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푸틴은 향후 인접국의 반정부 시위에 개입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반러 정권이 들어설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서양 질서도 러시아의 동의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을 압축하면 첫째, 근외지역의 안정을 바탕으로 소련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근외지역을 기반으로 지정학적 틈새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그동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러시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러한 명분을 잃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을 네오나치즘(neo-nazism)과의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독일 나치즘을 물리친 5월 9일 러시아 전승기념일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네오나치즘의 상징이 되는 아조프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마리우폴 점령에 체첸군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물론 아조프해를 러시아 내해로 만들고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둘째, 카자흐스탄 시위 진압 과정이 확인시켜 준 것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군사적·경제적 개입의 결정권은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러시아가 활용하는 개입 기제이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러시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이 참전을 미루고 있다. 서방의 대러 제재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연대는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잃어 이를 완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가 유라시아 국가의 러시아 디아스포라를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모스크바 시의회 대변인이 갑자기 발트 3국, 카자흐스탄 등의 비(非)나치화를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북극개발은 미국의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독일 등 EU 회원국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의 야말(Yamal) LNG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행위자로 위상을 높이려 하였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이 대러 에너지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에너지에 대한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국, 인도로 수출을 늘리려고 하겠지만, 북극 야말의 LNG 개발 사업에 정부의 보조금을 넣었다는 점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극을 개발하여 유라시아의 전략적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넷째, 서방의 반도체 등의 금수 조치로 러시아의 첨단기술 개발은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 인도와의 협력만으로는 러시아가 디지털 전환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푸틴 대통령은 냉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을 2007년 제42차 뮌헨안보정책회의에서 서방을 향한 공세적 발언으로 표출하였다. 미국이 구축한 단극체제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추구

하는 제국주의적 꿈을 다시 드러냈다. 푸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고 급진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푸틴은 글로벌 질서 재편에 조응하고자 ‘강대국 러시아’의 존재감과 ‘전략 축’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공세적으로 전개하였고,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확연하게 드러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카자흐스탄 시위 진압 등으로 새로운 질서 구축에 있어 미·중만 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역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전략이 성과보다는 문제를 노출하게 되었다. 유라시아 주변국에 대한 성공이 푸틴 체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전략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끝/

저자 소개

이상준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국민대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외대 슬라브연구 편집위원, 서울대 러시아연구 편집위원, 한러대화(KRD) 경제통상분과 간사위원, 한러 비즈니스협의회(KRBC) 부회장, 한러교류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신실크로드 협의회 자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자문위원, 한국 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Email: sjoon@kookmin.ac.kr)